

주간 통일정세

2015-50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남조선, 북남대화 파탄 책임 못 벗어나”…또 책임 전가(12/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5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정책과 음모책동으로 북남당국회담은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더욱 암담해졌다”며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를 파탄시키고 관계개선의 기회를 날려보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어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흩어진 가족·친척 문제를 해결하며 교류사업도 활성화 해나갈 것을 제기했으나 남측이 북남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잡다한 문제를 잔뜩 들고나와 인위적 난관과 장애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으며, 또 “남측이 ‘핵 문제’를 대화탁에 올려놓으려다 우리의 즉시적 된 타격을 받고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면서 “남측은 당국회담 격에 어울리지 않는 시시껄렁한 문제를 나열하면서 금강산관광재개 문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함.
 - 또한 통신은 “우리는 회담 날짜를 연장해가면서까지 설득도 하고 아량도 보였지만 남측은 금강산관광재개는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나자빠짐으로써 끝끝내 회담을 결렬로 몰아넣었다”고 덧붙임.
- 北, ‘이산가족-금강산 맞교환 부적절’ 홍용표 발언 비난(12/1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8일 “겉으로는 대화를 운운하지만 실지로는(실체로) 이번 당국회담의 책임을 회피하고 나아가 저들의 대결적 자세를 계속 유지할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맞교환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당국회담 결렬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횡설수설”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번 회담에서 제기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북남(남북)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을 위한 매우 절실한 문제이고 또 거래의 의사와 요구인

것으로서 반대할 하등의 리유(이유)나 근거가 없다”면서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회담에서 이 현실 가능하고 쉬운 사업에 대해 한사코 반대해 나섰다”고 주장함.

- 이어 “남조선 당국에게는 애당초 회담 자체가 마음에 없었다”면서 “이전 정권도 해보지 못한 당국회담을 저들이 치렀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결적 흥심도 가리고 남조선 민심으로부터도 점수를 따보려 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홍용표 “北, 당국회담서 인권법 제정에 불만표시”(12/1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지난 11~12일 개성 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15일 보도함.
 - 뉴스는 홍 장관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특히 남북 당국회담에서 우리 측 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자들의 반응과 관련, “(북한측은) 인권 문제니 이런 것들이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음을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조엘 위트 “북한, 2020년에 가면 100kt급 수소폭탄 배치”(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특과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우리의 예측으로는 북한이 2020년께 10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7일 보도를 통해 전함.
 - 100킬로톤은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 위력

의 5배에 달하는 것이며, 통상 수소폭탄은 2단계로 구성되나 북한이 2020년께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 수소폭탄은 그보다는 기술 수준이 낮은 1단계가 될 것이라고 위트 연구원이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위트 연구원은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2020년께에는 수소폭탄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반드시 실험을 거쳐야 한다”며 “높은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 무기를 실험하려면 기존의 핵실험 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만일 북한이 더 큰 폭발력을 시험하기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굴착하는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수소폭탄 개발의) 단서가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한미약품, 북한에 10억 원 규모 어린이의약품 기증(12/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6일 한미약품이 어린이비타민(텐텐츄정), 종합감기약(써스펜시리즈) 등 10억 원 규모의 의약품을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지원한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에 한미약품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함께 인천항에서 물자 북송식을 치른 후 중국 다롄을 거쳐 해당 물품이 북한 현지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는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이 총 11개과로 구성된 43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문병원이라 소개했으며, 이번 지원과 관련하여 임종철 한미약품 자문위원은 “한미약품의 의약품 북송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나동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이사장은 “이번 북송이 남북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사업에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음을 전함.
- 북매체 “금강산관광 신변 보장, 이미 최고수준 약속” 주장(12/2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 고학철 명의의 ‘남조선 당국에 묻는다’란 글에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 보장문제에 대해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때 최고 수준의 담보를 약속한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함.
 - 매체는 2008년 7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을 거론하면서 “관광지구의 규정을 어기고 군사통제구역 안에 들어간 관광객이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남한 당국이) 왜 관광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잘 알려주고 철저히 지키라고 강조하지 못했는가” 라고 지적함.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외세와의 공조는 북남관계를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면서 민족의 운명을 팔아먹는 반역행위’라며 ‘외세의존과 체제대결로는 북남관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12.14,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국방부의 ‘스텔스 무인기’ 개발 추진에 대해 “북침공격태세를 완비하려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남한의 정치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한 관계개선의 길은 열릴 수 없다’고 비난(12.15,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유엔의 ‘군축·비확산 회의(12.7·8, 서울)’에 대해 ‘우리(北)를 무장 해제시키고 체제통일,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反北 모의판’이며 유엔의 방관자적 자세도 ‘한반도 지역의 정세악화만 더해줄 뿐’이라고 비난(12.15,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軍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대응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등) 개최 관련 ‘백두산 혁명 강군의 군사적 위력에 질겁한 자들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라며 ‘남조선 호전광들이 군사적 대결소동을 강화하려는 것은 대화와 평화의 파괴자, 전쟁 미치광이로서의 그들의 흉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해 주고 있다’고 비난(12.20,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외무성, 美대북제재 비난…“시대착오적 적대시 정책”(1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국이 우리의 무력, 군수, 무역기관들과 일꾼들, 지어(심지어) 외교관들까지 함부로 제재명단에 올리는 놀음에 계속 매달리는 데는 우리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을 하여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의 거래를 꺼려하도록 함으로써 군수공업부문은 물론 민수분야를 포함한 우리의 경제

전반을 질식시켜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기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보도함.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제재소동은 오히려 우리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의 자력갱생 정신과 자강력을 더욱 분발시킬 뿐이며 결국 우리 군수공업의 국산화 비율만 높아지게 할 뿐”이라고 말했고, 북한이 앞서 평화협정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미국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상할 수 없는 결과만이 차례질 것”이라고 위협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백악관 “북한, 비핵화에 진정성 보여주면 모든 것이 가능”(12/20, 연합뉴스)
 -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의하면 지난 1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대니얼 크라이튼 브링크 미국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everything is possible as long as North Korea demonstrates that it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고 밝힘.
 - 또한, 크라이튼 브링크 보좌관은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인 비핵화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비핵화의 길을 걸어 내려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힘.

마. 대중국

- “중국, ‘수소폭탄발언’ 뒤 모란봉악단 관람인사 급 대폭 낮췄다”(12/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보도에서 베이징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은 북한 국방위 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한 뒤 중국 당국이 공연관람 인사를 당 정치국원(지도자급)에서 부부장급(차관급) 인사로 대폭 낮췄다고 보도하였으며, 이처럼 중국이 공연참석 인사를 정치국원에서 부부장급으로

변경했다면 ‘격’을 3~4단계 정도 떨어트린 것이라고 설명함.

- 소식통은 “조선(북한)은 당초 중국에 시 주석이나 리 총리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한 명의 정치국원이 참석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북한도 처음에 동의했으나 지난 10일 공연단이 베이징에 도착한 것과 비슷한 시점에 김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덧붙임.
- 뉴스는 이에 “중국은 항의 표시로 (공연 관람 인사를 정치국원에서) 부부장급으로 낮췄다”며 김 제1위원장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불만을 제기하며 모란봉 악단을 전격 철수시켰다고 설명하였고, 모란봉악단이 베이징에 도착한 뒤부터 가까운 곳에서 이들을 지켜본 한 소식통은 “취소 배경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면서도 “악단들이 베이징에 도착한 뒤 양측이 공연문제를 조율했는데 계속 잘 안됐다”고 전함.

■ 주북한 중국대사관도 ‘화교 100명 체포설’에 이례적 반박(12/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7일 보도를 통해 주북한 중국대사관이 최근 한국의 일부 매체들의 ‘북한당국의 화교 100명 체포설’ 보도에 대해 “허황된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고 전함.
- 주북 중국대사관은 16일 밤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성명에서 “중조(중국과 북한) 양국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이웃국가”라며 “조선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화교는 약 3천 명으로 주로 평양과 신의주, 청진 등지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조선을 여행하는 화교는 규율과 법을 준수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면서 조선 인민과 함께 조선의 경제사회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또한) 중조 간의 전통적 우의를 계승하고 일으키기 위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 주북대사관은 특히 “조선을 여행하는 화교의 위법행위는 극히 드문 현상으로, 이른바 ‘간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의한) ‘화교 100명 체포설’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유엔총회, 2년 연속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1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 보도를 통해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년 연속 채택했다고 전함.
 -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 유린과 관련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유하는 게 골자이며,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 10월 열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인권 서울사무소 개소를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뉴스는 이날 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사회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반대는 3위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19개국이었는데 여기에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이 포함됐다고 전함.
- 유엔 인권현장사무소장 “北 인권개선 위해 방북 고려”(12/1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일 보도를 통해 사인 폴슨 유엔 인권현장사무소장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폴슨 소장은 18일 “북한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상황에 대한 최신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 사무소의 중요한 목표”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북한이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퇴치 등 일부 권고를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자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 기타 국가

- 북한 외무성 당국자들 영국 의회 방문, 인권 등 논의(12/1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보도를 통해 영국 의회 내 초당파 의원들의 모임인 ‘대북정책협의회’의 공동 의장인 피요나 브루스 의원이 지난 10일 런던에서 북한 외무성 대표단을 만났다고 전하면서, 이 날 영국 의회를 방문한 북한 대표단은 북한 외무성의 김선경 구주국장과 런던주재 북한대사관의 현학봉 대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함.
 - 방송은 브루스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 사항 가운데 어떤 권고들을 이행하고 있는냐고 물었고, 이에 북한의 김선경 국장은 북한 정부가 수용을 약속한 많은 UPR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이행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전함.
 - 이 밖에도 브루스 의원은 북한 대표단에게 남북관계, 특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북한의 김 국장은 남북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방송은 전함.

- “영국 구호단체, 北수재민에 단열 천막 지원”(12/18,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보도를 통해 영국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셸터박스(Shelter Box)’는 나선 지역 수재민을 위한 특수 단열 텐트 500개와 난로, 담요, 전등, 물통 등 각종 생필품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다음 주 2차 구호 지원 물품의 수송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함.
 - 이번 지원 사업의 예산은 총 38만 달러(한화 4억 4천여 만 원)로, 영국 정부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개인 기부자의 모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방송은 전함.
 - 이어 방송은 셸터박스 측은 “직원 2명이 내년 1월 말 나선에 약 10일간 파견돼 올해 지원 물품이 수재민에게 정확히 분배되고 잘 이용되는지 모니터링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함.

- 日 법원의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 혐의’ 「총련」 의장 차남 등 유죄 판결 관련 ‘공화국의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며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공화국은 절대로

- 수수방관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12.14,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제군사체육이사회 위원장(압둘하킴 모하메드 이싸 알사누)과 일행, 12월 14일 귀국(12.14,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총기류 범죄·빈부격차·실업문제' 등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국제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12.1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역사검증위원회' 출범은 "침략사를 합리화, 정당화하고 그를 밑거름으로 하여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12.1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의 새 우주법(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 채택 본질은 "우주헌병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 및 '우주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우주개발 권리행사' 강조(12.15, 중앙통신·민주조선)
- 최고인민회의 대표단(단장: 안동춘 부의장), 12월 15일 캄보디아(아시아의회 회의 제8차 총회 참석)에서 귀환(12.15,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1기병사단 소속 1기병여단 병력(4,500여명) 南 순환배치 관련 '오직 북침전쟁의 길로만 내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며 '조선반도 정세격화의 주범, 평화의 원수'라고 비난(12.16,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이 평화협정체결 문제와 비핵화문제를 뒤섞어놓고 황당한 주장들만 늘어놓으며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규탄하며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에 속히 응해 나올 것'을 재차 촉구(12.19, 중앙통신·노동신문)
- 윌리엄 페리 전 미국방장관 인터뷰내용(영변핵시설 공습계획 구상) 관련 '작전계획 5030' 등 각종 한미 합동군사연습들을 거론 '미국은 호시탐탐 북침의 기회를 노리며 핵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핵억제력' 강화의 정당성 주장(12.19,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노동당창건 70주년 연설원고에 '핵' 넣었다가 삭제"(12/16, 도쿄신문)
 - 도쿄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서 했던 연설의 원래 원고에는 핵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연설에서는 빠졌다고 16일 보도함.
 -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작성한 연설문 원안에 "미국의 공화국(북한) 압살 책동에 결사항전하고 공화국의 핵 주권을 굳게 지키겠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항 수단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핵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으며, 원안에는 미사일 개발에 관한 언급도 포함된 데다 군사 행진에서 ‘핵 강국’ 등의 구호를 등장시키는 것까지 검토됐다고 전함.

- 北 김정은, 김정일 4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1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며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했다”고 보도하였으며,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이번 참배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양옆에 섰고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총정치국 조남진 조직부국장과 럽철성 선전부국장, 리용주 해군사령관,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도 참석함.
 -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의 명의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에서 ‘숭고한 경의’를 표했으며, 이에 신문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4돌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김정은, 기계종합공장 시찰…“최고 수준” 극찬(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생산공정이 고도로 현대화되었으며, 생산문화, 생활 문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확립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지도(시찰)하시였다”고 2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시찰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실시간 장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다”면서 “이 공장 통합생산체계는 우리나라 기계제작공업 부문에서 최고의 수준”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또 “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거뜬히 갖추어놓은 것은 물론 우리의 설계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수자조종공작기계와 공업용 로봇(로봇), 무인소재운반차, 자동창고 등으로 이루어진 유연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장을 21세기 산업발전의 추세에 맞게 전변시켰다”고 말함.
 - 김 제1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의 불멸의 업적이 있었기에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의 오늘이 있다”면서 “현대적으로 개건된 공장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러난다”며 과거 김정일 위원장 생전에 함께 이 공장을 찾았던 때를 회상하기도 함.

- 이날 시찰에는 오수용 노동당 비서, 조용원 당 부부장, 홍영철 기계공업부(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등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최룡해, 함남 덕성군 협동농장서 혁명화 교육”(12/15,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5일 함경남도 소식통을 인용하여 “최룡해는 지난 11월 9일경 덕성군 장흥협동농장에 혁명화 조치를 받고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최룡해는 덕성군에서 주요 농업단위로 평가 받고 있는 장흥 협동농장에서 일반 농장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소식통은 “양강도에 건설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공사부실 책임을 지고 덕성군 장흥리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함경남도 지역은 물론 멀리 양강도까지 최룡해 혁명화 조치 소문이 퍼져있다”고 전함.
- 북한, 케냐 대사에 명경철 임명(12/15,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5일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에게 명경철 대사가 8일 신임장을 봉정했다”고 보도하면서, 명 신임 대사가 케냐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함.
 - 이에 방송은 케냐타 대통령은 사의를 표시하고 “케냐 정부와 인민은 조선의 북과 남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전 민족의 번영을 하루 속히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북한 “노동당 제7차대회 내년 5월초 열린다”(1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오후 ‘세계적 수준으로 전변될 삼천메기공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당 역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될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는 주체105(2016)년 5월 초에 열리게 된다”고 보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北, 임현수 목사에 종신노역형…“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1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서 “재판에서는 피소자(피고) 임현수에게 무기노동교화형(종신노역형)이 언도(선고)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재판에서는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임현수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되었으며 사실심리가 있었다”면서 “피소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물들이 제시되었다”고 밝혔고, 이어 “심리과정에서 피소자 임현수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 밑에 국가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사실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통신은 검사가 임 목사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인은 “그가 앞으로 통일된 조국, 부강번영하는 태양민족의 참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기소측이 제기한 사형이 아니라 다른 형벌로 양정(양형)하여 줄 것을 본 재판에 제기하였다”고 전했으며, 재판에는 각계층 군중들과 북한에 체류 중인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고 덧붙임.
- “北, 4년간 김일성·김정일 기념탑 250개 건립”(12/1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4년 동안 250개 이상의 김일성·김정일 기념탑을 세우고, 약 35개의 김정일 동상을 건립하는 등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방송은 올해 들어 나선시와 자강도 강계, 함경남도 함흥, 강원도 원산, 양강도 혜산시를 비롯해 평양과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해주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등 각 도의 행정 중심지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 건립이 추진됐고, 최근에는 김일성 정치대학과 평양시 룡성구역의 제2자연과학원,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동상 건립이 확인됐다고 전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특이사항 없음.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11권'(1968년 5월부터 12월까지 발표된 111건 저작 수록) 출판(12.14,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삼천메기공장 현지지도 및 “세계적인 메기공장으로 전변(양어의 주체화·과학화·집약화·공업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시킬 데 대한 과업” 지시(12.16,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현지지도 사적비(빛나라 단천제련소에 깃든 불멸의 자욱이여), 단천제련소에 건립(12.15,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삼천메기공장’에서 제시한 과업(세계적 수준의 메기공장으로 전변) 관련 ‘현대화공사를 黨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다음해 10월 10일까지 끝내겠다’는 공장 노동계급의 각오와 함께 ‘2016년 5월초 黨 제7차 대회가 열린다’고 주장(12.16, 중앙통신)
- ‘김정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 승리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강철의 청년 대오는 주체혁명 위업의 강위력한 추동력, 억척의 지지점’이라며 ‘불패의 청년 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량이며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라고 강조(12.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12권'(1969년 1월부터 7월까지 발표된 95건 저작 수록) 출판(12.20, 중앙통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北, 25년 만에 재정은행대회·“재정 강화가 강성국가 필수”(12/1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14일 “제3차 전국 재정은행 일꾼대회가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기간 재정은행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하고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재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토의했다고 설명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정은행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며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자면 자체의 믿음직한 재정 원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러면서 “재정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와 개별적 단위의 창발성을 옹기 결합시켜야 한다”며

- “국가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며 기업체들의 재정관리와 화폐유통사업을 개선하고 금융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재정은행사업 일꾼들은 인민이 벌어들인 귀중한 자금을 아껴쓰며 나라 살림살이를 간지게(빈틈없고 야무지게) 꾸려가는 인민의 총복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며, 재정은행사업은 화폐 자금을 수단으로 해 나라의 살림살이를 계획적으로 꾸려나가며 국가 경제기관과 기업소들의 관리운명을 규제하고 조절 통제하는 경제사업이라고 방송은 설명함.
 - 방송은 이날 대회에 박봉주 내각 총리,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수용 노동당 비서, 로두철·리무영·리철만 내각 부총리, 기광호 재정상, 김천균 중앙은행 총재, 김성의 무역은행 총재, 전국의 모범적인 재정은행일꾼과 근로자들이 참석했으며,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대회 보고를 하고 참석자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전하는 맹세문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나.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北 50년 석유탐사 결국 실패…中과 수역갈등·정치불안 탓”(12/14, 38노스,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38노스의 북한 석유 및 가스 탐사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50년간 수차례 시도해 온 석유 탐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함.
 - 보고서는 북한 석유 탐사의 실패 원인으로 중국과의 수역관할 갈등에 따른 현대식 채굴장비 부족과 정치불안을 꼽았으며, 우선 자원 확보에 공격적인 중국이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해(서한만 일대)의 해양경계선 문제를 두고 북한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내세워 북한에 현대식 채굴 장비를 팔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도 자국에 유리한 해양경계선 설정이라는 목표가 깔려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지난 2005년 북한과 서한만 분지의 원유 개발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중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이면서 현재 6~7개 외국 정유업체가 북한과 석유 및 가스 탐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 진척 여부는 외국업체의 원활한 채굴 비용 및 기술 제공과 북한 정부의 정치 불안 해소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함.

■ 북, 각종 공사로 산림훼손 심각(12/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훼손된 산림 복구를 위해 나무심기를 독려하고 있지만 각종 건설을 구실로 해마다 파괴되는 산림면적이 새로 조성되는 산림면적의 배를 넘는다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라는 구호를 내놓고 10년 안에 북한의 훼손된 산림을 원상대로 복구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복구는 고사하고 산림은 점점 더 파괴하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덧붙임.
- 이어 소식통은 양강도에서 산림이 가장 울창한 백암군만 해도 올해 ‘10월18일 종합농장’ 확장공사와 ‘백두산청년발전소’ 건설, ‘대택탄광’ 공사로 광범한 지역의 산림을 훼손됐는데 라선시 큰물피해 복구를 위해 예정에 없던 대량 채벌까지 이루어졌다고 전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혜산-삼지연 사이 ‘백두산관광철도’ 건설도 기존의 인원 3만 명에 추가로 농업근로자들 3만 명을 더 투입했는데, 이들이 공사 중인 구간엔 풀대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산림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소식통은 양강도가 올해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건축 건설을 위해 삼수군과 풍서군, 갑산군에서 각각 3백 입방씩의 통나무들을 건설용으로 베어냈는데 이런 산림훼손은 양강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범위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단행됐다고 밝혔으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 조성한 산림면적에 비해 국가적인 공하나 자재보장을 위해 훼손된 산림면적이 배가 넘을 것이고, 중앙에서 산림조성을 떠들지만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가 요원한 얘기”라고 강조함.

■ 북 해외 주재원 연말 상납금 압박 시달려(12/16,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요즘 남방에 파견된 한 해외 상사원은 상납금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본국에서 소환령이 떨어질 까봐 밤 잠을 설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람은 충성자금 계획을 몇 달 미납한 상태인데 본국에서는 연말에 밀린

금액까지 다 바치라고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소식통은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무역일꾼들 가운데는 이처럼 계획 미달자들이 적지 않는데, 이들 가족들은 혹시 철수하라는 전화라도 오지 않을까 근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무역주재원들이 상납하는 목표액은 기관이나 대상에 따라 연간 2~5만 달러 가량이며,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 기술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스위스, 북 사회기반시설 재정지원(12/15,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발표를 인용하여 스위스 정부가 최근 북한의 경제회복과 사회기반시설 지원 분야에 미화 약 10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다고 보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재정확인서비스(FTS)’ 사이트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 10월 북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에 10만 3천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방송은 지난 6월 같은 분야에 약 1만 2천 500달러, 그리고 지난 2월 산간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10만 9천여 달러 등 스위스 정부가 올해 북한의 ‘경제회복과 기반시설’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약 22만 4천 달러로, 스위스의 올해 대북지원 총액인 950만 달러의 2.4%에 달한다고 설명함.
 - 이 밖에도 스위스는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등 5개 도의 농촌 지역에 수도관과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상하수도 지원 분야에 약 2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유럽의 민간연구소인 농업생명과학센터(CABI)에 약 16만 달러, 산간농법기술 지원에 약 110만 달러 등 농업 기술 분야에 126만여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북한 산간지역 주민의 형편 개선 및 산림 황폐화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러시아, WFP 북한 영양식품 공급사업 최대 지원국”(12/15,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러시아가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영양강화식품 공급 사업에 300만 달러(35억 4천여 만원)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올해 이 사업의 최대 지원국이 됐다고 15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WFP의 ‘2015년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6월과 10월에 각각 지원한 400만 달러, 200만 달러와 합하면 러시아의 지원액은 총 900만 달러(106억 4천여 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하였고, 국가별 지원 금액은 러시아에 이어 스위스 593만 달러(70억 1천여 만원),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390만 달러(46억 1천여 만원), 호주 230만 달러(27억 2천여 만원), 한국 200만 달러(23억 6천여 만원), 캐나다 160만 달러(18억 9천여 만원) 등이라고 덧붙였다.
- WFP “북한 당국, 식량 분배감시에 매우 협조적”(12/16,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 보도를 통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올 한 해 북한에서 1천800여 차례의 분배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 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이 식량 분배 과정에서 중간에 식량이 빼돌려지거나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음을 전함.
 - 킨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 분배감시 요원이 이 모든 과정에서 식량이 중간에 빼돌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량의 질과 양을 확인하고 직접 주민들이 분배된 식량을 먹는 것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배감시 활동에 북한 당국이 매우 협조적이라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대변인은 감시단의 장마당 접근도 가능하며, 다수의 분배감시 요원이 북한에 상주하며 분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현장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 (No Access- No Aid)” 즉, 지원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직접 검증한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분배감시 활동을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함.
- “올해 국제사회 北 인도적 지원액 3천만 달러”(12/17,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사이트를 인용해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이 3천만 달러로 지난해 2천 800만 달러보다 조금 많았지만 2012년의 1억 1천300만 달러, 2013년의 6천2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저조한 상황이라고 보도함.
 - 그러면서 방송은 올해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한 국가는 7개국으로, 스위스의 지원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어 한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순이라고 보도함.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열간압연공정 CNC화를 조선식으로 완성” 등 주요 생산공정 현대화공사 완공 및 ‘黨 중앙총 축하문’ 전달 소식 보도(12.15, 중앙방송·중앙통신)
- 사리원 해운사업소, 200t급 자행선(자체 동력기관으로 움직이는 화물선) 새로 건조(12.16, 중앙방송)
- 北 경제전선, 黨 제7차 대회를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고 선전(12.16, 중앙통신)
- 청진시 포항지구, 관람실·울동오락실·전자오락실·전자사격장 등이 꾸려진 ‘입체 울동영화관’ 신설(12.19,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김정은 극찬한 ‘창광상점’ 상품 質 떨어져 파리날려”(12/16, 데일리NK)
 - 데일리NK는 16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이 지난 9월 인민생활 개선을 위해 신축했다고 선전한 평양의 ‘창광상점’이 실제로는 중앙당(黨) 고위 간부들만을 위한 상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진열되는 상품은 북한 국내산으로 질이 떨어져 창광상점을 이용하는 간부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당국은 이 상점을 가리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멋쟁이 상점’이라 선전하지만 걸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했을 뿐 손님이 없어 썰렁하다”며 “진열 장에는 호감 끝만한 수입용품 대신 평양 시내 일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만 있어 마치 ‘국내 상품전시장’을 방불케 한다”고 설명하였고, “상점 내부 넓은 공지에는 청량음료(카페)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만 몇몇 사람들만 눈에 띈다”면서 “창광상점과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단층 외화상점에는 외국 상품들이 많아 발을 들여 놓기 어려울 정도로 간부들과 가족들이 찾는다”고 전함.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영유아 사망 감소 추세(12/14,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 지부의 발표를 인용하여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은 2015년 1천 명당 26명 (2.6%) 이라고 전했으며, 이는 특히 2015년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1990년 당시 1천 명당 43명 (4.3%) 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라고 보도함.
 - 또한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북한 신생아 사망률은 1천 명당 14명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 올해 사망한 신생아는 총 5천명에 달하는 수준이고 이러한 신생아 사망은 출산 시와 출산 직후의 감염이 주원인이라고 함.
- 북한 “올해 국제대회서 금메달 90여 개 획득”(12/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보도를 통해 북한의 스포츠 선수들이 올해 국제경기에서 금메달 90여 개를 포함해 약 250개에 달하는 메달을 따냈다고 전함.
 - 이 가운데 북한 여자축구팀은 지난 8월 열린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동아시안컵)에서 남한 대표팀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고 통신은 전했으며,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우승하고 귀국한 북한 여자 축구선수들을 평양 순안국제공항까지 직접 나가 마중했다고 전함.
 - 특히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이 개최한 제19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은 금메달 1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 북한을 국가별 종합순위 1위에 올려놓았다고 통신은 전함.

- 예술인들과 청년학생들·여맹원들의 회고음악회, 평안북도·황해남도·황해북도·강원도·함경남도 등 각지에서 진행(12.17, 중앙통신)
- 北 체육인들, 올해 국제 경기들에서 “90여개 금메달 포함 근 250개 메달” 획득 및 “조국의 영예를 떨쳤다”고 선전(12.18, 중앙통신)
- 로철수(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北 김치 담그기 풍습의 <세계 비물질 문화유산> 등록(유네스코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10차 회의, 11.30-12.4 나미비아) 전언(12.18,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워싱턴서 외면 받는 ‘북핵’...“이대로 방치할건가” 제언 잇따라(12/15, 연합뉴스)
 - 내년도 미국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내년도 국정연설(1월12일)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인다는 게 소식통들의 관측이며, 북수의 소식통은 14일(현지시간) “내년에 가서 북핵문제를 새롭게 거론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에 소극적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오해이자 비약”이라며 “현재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뒤로 밀려나있을 뿐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와 꾸준히 협의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핵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 사이에서는 “북핵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음. 보수성향의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에 북한에 대한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문했으며, 중도성향의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뺀 5개국(한·미·일·중·러)만으로도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나. 미·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중·북 관계

- “중국, ‘수소폭탄발연’ 뒤 모란봉악단 관람인사 급 대폭 낮췄다.”(12/14, 연합뉴스)
 -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첫 공연이 무산된 것은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선언과 중국 측 공연관람 인사의 ‘격’을 둘러싼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익명의 중국정부 측 인사 A씨를 인용, 김정은 북한 국방위

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한 뒤 중국당국이 공연관람 인사를 당 정치국원(지도자급)에서 부부장급(차관급) 인사로 대폭 낮췄다고 전했다.

-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공연 내용이 양측의 문화교류 취지에 안 맞았던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음.

■ **中외교부, 모란봉악단 공연취소 이유 질문공세에 ‘묵묵부답’(12/14, 연합뉴스)**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모란봉악단이 느닷없이 공연을 취소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가 뭔지를 묻는 질문에 “신화통신이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며 “추가로 제공할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 중국당국은 모란봉악단이 북한으로 떠난 지난 12일 밤 신화통신을 통해 업무 관련 소통 문제로 공연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었다고 밝히며 공연의 형식·내용·관람 등과 관련해 양측에 이견이 존재했음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런 설명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실상 ‘배경을 밝히기 싫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 이는 중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더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됨.

■ **“中 모란봉악단 철수 후 北국경지대에 병력 증파”(12/14, 연합뉴스)**

-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베이징 공연이 무산된 직후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대에 병력을 증파했다는 주장이 나왔음. 홍콩의 중국인권민주화운동 정보센터는 14일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군 퇴역 인사를 인용, 중국 인민해방군이 12일 저녁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북중 국경지대로 2천명의 병력을 증파했다고 전했다.
- 북·중 관계가 소원해질 때마다 북한 접경지대에서는 중국군의 병력이동이나 증원, 군사훈련 소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음.
- 또 다른 한 소식통은 중국이 당초 북한에 석유물자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철회한데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격분해 모란봉악단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北 50년 석유탐사 결국 실패…中과 수역갈등·정치 불안 탓”(12/16,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50년간 석유탐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중국과의 수역갈등 등으로 결국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음.
 - VOA는 미국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즈가 지난 14일 웹사이트 ‘38노스’에 발표한 북한의 석유 및 가스 탐사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50년간 수차례 시도해 온 석유 탐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고 전했으며, 보고서는 북한 석유 탐사의 실패 원인으로 중국과의 수역관할 갈등에 따른 현대식 채굴장비 부족과 정치불안을 꼽았음.
 -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내세워 북한에 현대식 채굴 장비를 팔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도 자국에 유리한 해양경계선 설정이라는 목표가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 주북한 중국대사관도 ‘화교 100명 체포설’에 이례적 반박(12/17, 연합뉴스)
 - 주북한 중국대사관이 최근 한국의 일부 매체들의 ‘북한당국의 화교 100명 체포설’ 보도에 대해 “허황된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음. 주북 중국대사관은 16일 밤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성명에서 “중조(중국과 북한) 양국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이웃국가”라며 “조선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화교는 약 3천 명으로 주로 평양과 신의주, 청진 등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 주북 대사관은 특히 “조선을 여행하는 화교의 위법행위는 극히 드문 현상으로, 이른바 ‘간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의한) ‘화교 100명 체포설’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일축했으며, “새로운 시기, 새로운 국면에서 중조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 언론들의 관련 보도에 대한 이 같은 반응들은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로 악화된 중국인들의 대북 감정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을 중국 측이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 함.

- 中 “김정은 동지의 조선사회주의건설 공헌 높게 평가”(12/17, 연합뉴스)
 -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4주기를 맞은 17일 “김정은 동지가

조선(북한)사회주의 건설 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헌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음.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김정일 4주기인 오늘 주중 북한대사관에 파견한 정부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김정일 동지가 중조(中朝·중국과 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 한 중요한 공헌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러나 북한 대사관에 대한 정부인사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계획은 (추가로) 알아봐야 할 사항”이라며 자신은 잘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음.

■ **중환구시보 “北, 중국의 대북인권결의안 반대에 감사해야”(12/19, 연합뉴스)**

-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9일 중국이 유엔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 “(북한은 중국의) 호의를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신문은 이날 ‘중국이 조선인권결의(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합리적인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정부는 반대표를 던지는 과정에서 내부의 ‘압력’을 이겨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또 중국 내에는 중국 정부가 대북인권문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북한도 이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 관영언론이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로 중국인들의 대북감정이 악화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관계개선 노력을 촉구한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종의 불쾌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

■ **북한접경 중국 단둥~다롄 간 고속철도 개통…북·중 교역 기여할 듯(12/20, 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랴오닝성 제2의 도시 다롄(大連)을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됐음. 20일 중국 고속철도망(高鐵網)에 따르면 중국철도총공사는 단둥~다롄 간 고속철도 공사를 최근 준공, 지난 17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갔음.
- 새 고속철도는 다롄·피커우(皮口)·왕허(庄河)·하이양홍(海洋紅)·단둥항 등 보하이(渤海)만 북쪽 5개 항만을 연결하며 단둥을 거쳐 중국에 들어온 북한 무역물자를 내륙으로 공급해 북·중 교역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철도총공사는 하루 24대의 열차를 운행하면서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도 겸해 항만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총공사 측은 3년 전 하얼빈(哈爾濱)~다롄 간 고속철도 및 지난 9월 선양~단둥 간 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단둥~다롄 간 고속철도 개통으로 동북지방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빅 트라이앵글’ 철로망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WFP 북한 영양식품 공급사업 최대 지원국”(12/15, 연합뉴스)
 - 러시아가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영양 강화식품 공급 사업에 300만 달러(35억 4천여만 원)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올해 이 사업의 최대 지원국이 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음.
 - 방송은 이날 WFP의 ‘2015년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6월과 10월에 각각 지원한 400만 달러, 200만 달러와 합하면 러시아의 지원액은 총 900만 달러(106억4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WFP는 이 기금으로 함경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8개의 도와 남포시 등 9개 도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180만여 명에게 분유 등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음.
- “北 청봉악단도 8~9월 러시아 공연 때 비용 문제로 갈등”(12/17, 연합뉴스)
 - 최근 북한 모란봉악단이 중국 베이징 공연 직전 돌연 철수해 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북한 청봉악단도 지난 8~9월 러시아 공연 당시 비용 문제로 한때 러시아 측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 북한 소식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청봉악단의 지난 러시아 공연 때 돈 문제로 북·러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이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 공연장 대관료 등을 포함한 비용 30만 달러(약 3억5천400만 원)를 북측에 청구하자 북측이 이에 반발했고, 결국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른 대북 소식통은 “청봉악단이 상업적인 공연을 한 것이 아니라 북·러 친선의 해 기념공연을 한 것이어서 비용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北, 생물작용제 12종 보유…유사시 사용 가능성”(12/17,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은 17일 북한이 유사시 탄저균을 포함한 생물학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생물방어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은 이날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은 탄저균, 페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에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이들은 “현재 미 국방부는 검사용 샘플 사균화 처리 과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탄저균 검사용 샘플의 배송 중단을 선언한 상태”라며 “당분간 탄저균 검사용 샘플은 한국에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포함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샘플의 종류와 양 등을 한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반입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위안화 환율 통화바스켓 구성에 韓 원화는 빠져(12/14, 연합뉴스)
 - 중국 인민은행이 새롭게 도입하는 위안화 환율의 통화바스켓 연동제에 한국 원화는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은행은 14일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위안화 환율의 통화바스켓 연동제를 추진할 뜻을 밝히며 중국외환거래센터

- (CFETS)가 무역비중을 고려해 13개 통화 환율로 구성된 ‘CFETS 위안화 환율 지수’를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 중국과 무역비중이 큰 한국 원화는 CFETS 위안화 환율지수의 통화바스켓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바스켓에는 직거래 시장이 있는 국가들 위주로 포함된 것”이라면서 “원/위안 직거래 시장은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중 해양경계 논의 재개…1차 차관급회담 22일 개최(12/14,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간의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1차 회담이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됨. 기존의 국장급 회담이 격상돼 우리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차관급인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섬.
 - 이번 회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올해 내에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중 양국은 차관급과 국장급이 번갈아가며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가 이날 ‘협상 개시에 의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향후 최종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마라톤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中, 한반도 담당 외교부 고위직에 조선족 쿵쉬안유 임명(12/15, 연합뉴스)**
 -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중국 외교부의 부장조리(차관보급) 자리에 조선족 출신이 임명됐음. 15일 중국 온라인매체 평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쿵쉬안유(孔鉉佑·공현우) 중국 외교부 아주사(司·국) 사장(국장)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아세안 해상위험관리 포럼 개막식에 ‘부장조리’ 신분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음.
 - 쿵 부장조리는 이날 “해상의 평화·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지역 국가들의 공동책임으로, 이는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으며, 평파이는 “올해 56세인 그는 소수민족 간부”라며 “헤이룽장(黑龍江) 출신의 조선족으로 아시아 외교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 다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그의 직책이 여전히 ‘아주사 사장’으로 소개돼 있으며, 쿵 부장조리는 한국이나 북한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족 출신인데다 주일본 공사를 지낸 만큼 한반도, 일본 정세에 대해 매우 해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중 해경, 첫 ‘24시간 핫라인’ 구축…“불법조업 근절 기여”(12/17, 연합뉴스)
 - 한·중 해경당국이 인명구조, 불법조업 등 각종 해양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비상연락 공조체계(핫라인)’를 처음으로 구축했음. 우리 국민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와 중국 해경국(국장 멩홍웨이(孟宏伟))는 17일 베이징에 있는 중국 해경국에서 이 같은 합의내용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음.
 - 이번 협약에는 해양에서의 범죄예방 및 단속, 어업활동 보호 및 어업분쟁 관리,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해 양측이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관련 정보교환을 위해 두 기관 본부에 비상연락 창구를 개설하고, 매년 1회 기관장 정례회의, 인적교류, 함정 상호 방문, 함정 합동훈련 등을 전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음.
 - 해경 측은 해감총대, 어정국, 변방해경, 해관총서 네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중국의 해경 업무가 지난 2013년 3월 신설된 해경국으로 통합됐다고 이번 MOU는 실효성이 높은 어업분쟁 관리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다. 한·일 관계

- 한·일, ‘저작권 포럼’서 저작물 보호 협력방안 논의(12/14,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문화청과 공동으로 14일 일본 도쿄에서 ‘2015 한·일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저작물 침해와 보호’라는 주제로 양국의 정부기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저작권 산업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할 방안을 논의했음.
 - 이어 15일에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저작권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선 최근 제기되는 저작권 주요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저작권 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제도를 비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한·일 군 위안부협상 연내타결 사실상 무산…“입장차 재확인”(12/15,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음.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15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제11차 군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음.
 -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한국 측은 국가 차원의 책임의 명확히 하고 사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상덕 국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조기에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차기 협의시기에 대해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다.”라고 말했음.
 - 박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 군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각각 중요한 선거를 앞둔 양국의 정치 일정으로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며, 한국은 내년 4월에 총선, 일본은 7월께 참의원 선거를 각각 치를 예정이어서 양측 모두 국민 정서상 예민한 문제인 군위안부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외교부 “日的 ‘가토 선처요청’ 참작해 달라”…법무부에 공문전달(12/17, 연합뉴스)
 -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과 관련해 최근 우리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 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 달라”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 외교부는 공문에서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고, 18일이 한일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이니 일본 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은 법무부와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임. 일본 측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 개선 노력 등을 거론하면서 양국관계 발전이라는 대국적 관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를 우리 측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日정부 “산케이 무죄, 한·일 관계 관점서 긍정적 평가”(12/18,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

- 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판결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그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일한 관계의 관점에서도 평가(가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하고 싶다.”며 양국의 “관계를 추진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 아울러 스가 장관은 한·일 간 중대 현안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장급 협의를 끈질기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하고, 가속화한다는 종래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日외무상 “수교 50년 한·일, 대국적 관점서 미래지향 노력해야”(12/18,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8일자로 한·일 수교를 위한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 기시다는 “지난 50년간 일한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일본에게 한국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하나이고, 일한관계는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 **야스쿠니신사 폭발음사건 韓 용의자 구금기간 10일 연장(12/18, 연합뉴스)**
 -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체포된 한국인 전모(27) 씨가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14일 파악됐으며, 수사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11일 도쿄지 방재판소(도쿄지법)는 전씨에 대해 구류(勾留)장(구속영장에 해당)을 발부했음.
 - 전씨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9일 체포됐으며 11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금 기간이 10일간 연장됐었으며, 추가로 10일 또 연장되어 구금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늘어났으며, 경시청 공안부는 전씨에게 폭발문단속벌칙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야스쿠니신사의 폭발음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임.
 - 또한 지난 16일 전씨가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체를 자신이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고 마이니치(毎日) 신문이 16일 보도했음. 이에 따르면 수사 관계자들은 전씨가 야스쿠니신사의 폭발음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3일 신사 남문(南門)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발견된 디지털 타이머, 금속 파이프 묶음, 건전지 등에 대해 “내가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시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 일본인들 “한-일 협력은 역사문제 해결보다 문화교류가 우선”(12/20, 연합뉴스)
 - 일본인들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분야로 역사문제 해결보다는 문화 교류를 우선 꼽는 것으로 조사됐음. 20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이달 2일 사이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문화 교류(81.7%)였음.
 -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62.3%,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답변은 61.9%였으며, 외무성이 제시한 10가지 구체적 사례 가운데 독도 영유권, 역사 문제는 순위로 따져 각각 8위, 9위였음. 응답자들은 일본과 중국이 협력해야 할 과제로는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나 공중위생·질병 대책(83.5%)을 가장 많이 꼽았음.

라. 한·러 관계

- 모스크바서 한-러 수교 25주년 마무리 송년 음악회(12/18, 연합뉴스)
 -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서 17일(현지시간) 양국 수교 25주년 행사를 마무리하는 송년 음악회가 열렸음. 러시아의 정치·경제·문화계 주요인사와 대사관 직원, 한국 교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음악회에서는 2012년 모스크바 영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는 한국 피아니스트 이혁, 러시아 트럼펫 연주자 블라디슬라프 라브릭, 소프라노 예브게니야 그리쉬코 등이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음.
 - 윤 장관은 박노벽 주러 대사가 대독한 축사에서 “현재 한-러 양국은 양자 차원을 넘어 유라시아 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 라브로프 장관은 안드레이 쿨릭 외교부 아주1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러 양국의 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폭넓게 발전해 가고 있다.”면서 “문화-인문 분야 교류도 양국의 신뢰와 상호이해, 교류 증진 분위기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마. 미·중 관계

- “中 링지화, 권력 심장부 중난하이 경비기밀 등 빼내 美에 넘겨”(12/14, 연합뉴스)
 -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令計畫)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 당 중앙관공청 주임 재직 말기 중난하이(中南海) 경비 기밀 등 국가 기밀을 대량으로 빼낸 후 낙마하자 미국에 제공했다는 관측이 나왔음.
 - 작년 12월 부패 혐의로 낙마한 지 8개월만인 지난 7월 공작·당적을 모두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받은 링 전 부장이 빼낸 국가 기밀 중에는 중난하이의 지형과 경비 편제 및 절차, 비밀 초소, 통신 암호는 물론 돌발사건 발생 시 당·정·군 핵심 기관 간 분담 역할과 관계 등이 포함돼있다고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가 13일 홍콩 잡지 ‘쟁명(爭鳴)’을 인용해 보도했음.
 - 시진핑 국가 주석은 링 전 부장의 국가 기밀 절취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분노하며 그를 권력에서 제거한 데 이어 중앙 관공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음. 이와 관련해 멩젠주(孟建柱) 중국 공산당 중앙 정법위원회 서기는 작년 10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 폐막직후 열린 정법공작회의에서 리 전 부장이 국가 기밀을 대량 빼내 미국에 유출했다고 말했다고 홍콩 월간지 ‘전초(前哨)’ 최신호가 전했다.
- 오바마-시진핑 전화통화 “파리기후협정 실효성 확보하자”(12/14,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파리기후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다짐했음. 1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 결실을 본 파리 기후협정은 2020년부터 전지구적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마련해줬다.”고 밝혔음.
 - 시 주석은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각국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파리기후협정의 유효한 실행 체제를 확보하고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각적인 실무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해 “유엔 기후변화 파리대회가 역사적인 협정에 합의한 것은 경축할만한 일”이라며 “이는 미·중 양국과 각국 모두가 힘을 합쳐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음.
 - 실제 이번 파리기후협정이 타결된 배경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각각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새 협정 타결에 적극적이었던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옴.

-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남중국해 군비경쟁 우려”(12/15, 연합뉴스)
 - 스콧 스위프트 미군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군비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음. 15일(현지시각)로이터가 입수한 연설 원고에 따르면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은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협력전략포럼(CSF)에 참석,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이 해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음.
 - 스위프트 사령관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나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자체 방어를 위해 필요한 수준 이상의 재원을 해군력 증강에 투입하고 있다.”며 “중국 등 국가들이 영유권 주장을 위해 군사력에 의존, 이 지역이 군비경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했음.
 - 중국이 2013년부터 남중국해 해역에서 7개의 인공섬 건설에 들어가자 미국은 이를 비판하며 지난 10월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내세워 군함과 항공기를 해당 해역에 파견해 중국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미국, 중국 반발에도 대만에 구축함 두 대 판매한다.”(12/15,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대만에 유도탄 장착 구축함 두 대를 판매하는 것을 이르면 이번 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의회소식통들이 전했다.
 - 공화당 소속 의회의 소식통은 “우리는 이번 주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미 중국대사관은 논평을 통해 “미국이 대만에 어떤 무기라도 판매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미·중 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 대만에 대한 이 같은 무기 판매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미·중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나왔음.

- 美전략폭격기 中인공섬 또 근접…‘실수’ 해명에도 갈등 격화(12/19, 연합뉴스)
 -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1대가 지난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 2해리(약 3.7km) 안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음. 미군 측은 이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비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중국군 측은 “군사적 도발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음.
 - WSJ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B-52 2대 중 1대가 의도치 않게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 산호초인 화양자오(華陽

礁(Cuarteron Reef) 가까이 접근해 2해리 이내에서 비행했다고 밝혔음.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전의 순찰 임무들과 달리 이번 임무는 12해리 이내에서 비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2대 중 1대가 왜 예정된 경로보다 더 가까이 중국 인공섬에 접근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은 이번 일과 관련해 주중 미국 대사관에 공식 항의했으며, 중국 국방부는 미군 B-52 폭격기 2대가 지난 10일 남중국해 난사군도 인근 상공을 무단 침입해 중국군이 면밀한 감시와 함께 퇴거를 경고했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 측의 이런 행동은 일종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로 남해(남중국해) 지역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심지어 군사화를 가속한다.”며 미국은 이런 위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음.

- **중외교부 “美전략폭격기 남중국해 근접 비행은 ‘도발행위’ 발끈(12/20,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 1대가 지난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 2해리(약 3.7km) 안까지 근접 비행한 데 대해 공식 항의하는 논평을 냈음. 20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전날 중국은 이 사건에 진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미 미국 측에 이 사건과 관련한 엄정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음.
 - 홍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 법에 따라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이지만 이를 구실로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중국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미국에 진지한 반성, 유사 도발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그러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치고 남중국해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음.
 - 한편 미군측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B-52 2대 중 1대가 의도치 않게 남중국해 난사군도 산호초인 화양자오 가까이 접근해 2해리 이내에서 비행했다면서 이전의 순찰 임무들과 달리 이번 임무는 12해리 이내에서 비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해명했음.

바. 미·일 관계

- **日각료 “오바마 히로시마 안 오면 노벨상 받은 가치 없어”(12/14, 연합뉴스)**
 - 벳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피폭지를 방문하지 않으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가치가 없다고 일본 각료가 말했다.

-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郎) 행정개혁담당상은 전날 히로시마 시에서 열린 자민당 행사에서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노벨상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히로시마·나가사키(長崎)에 오지 않으면 노벨상을 받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美日, 주일 미군 분담금 합의…5년간 9천 465억 엔(12/17,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양국의 향후 5년간 주일 미군의 경비 분담금에 대해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6일 보도했음.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에 일본 측이 부담하는 이른바 ‘배려 예산’은 9천465억 엔이 될 전망이다.
 - 일본 정부는 당초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해 분담금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주일 미군의 경비가 늘어나는데 따라 증액을 요구한 미국 측 입장을 수용키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내년 1월에 협정에 서명하고 3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협정 발효 첫 해인 2016회계연도(2016 4월1일~2017년 3월31일)의 분담금 평균 금액은 1천 893억 엔, 마지막 해인 2020회계연도에는 1천 899억 엔으로 각각 합의됐음.
 - 2016~2020년 기간에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요코스카 기지에 이지스함이 추가 배치되는 등 주일 미군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임.
- “일본, 對美 탄약제공협정 내년 선거 뒤로 미룰 방침”(12/19,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정권은 미군에 유사시 탄약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개정을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19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자위대와 미군이 물자와 역무를 서로 융통하는 ACSA의 개정안을 애초 내년 1월 4일 소집될 정기 국회 회기 중 제출할 방침이었지만 연기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으며, 이는 올해 한해 여론의 상당한 반대 속에 홍역을 치렀던 안보 법 관련 논란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일본 방위성은 개정 안보법에 따라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에 이른바 ‘출동 경호’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도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을 굳혔음.

- “日아베 정권 ‘미군기지 대립’ 오키나와 진흥예산 삭감 검토”(12/20, 연합뉴스)
 -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주일 미군기지 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립 중인 오키나와현 진흥 예산의 삭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오키나와 진흥 예산을 예산 요구서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 일본 정부 소식통은 예산 요구서 금액대로 반영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거론했으며, 일본 정부는 오나가 지사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보임.
 - 오키나와에는 일본 내 주일 미군기지의 약 74%가 밀집돼 있고 이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꽤 크며, 일본 정부가 예산을 쥐고 오키나와현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음. 내년 1월 오키나와현에서는 기노완 시장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미군기지 정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사. 미·러 관계

- 방러 케리 “러시아와 일부 분야에서 공통분모 찾아”(12/16, 연합뉴스)
 -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했음. 미-러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과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국제테러리즘과의 전쟁,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음.
 - 양측은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운명에 대한 기존 이견을 재확인하면서도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정치적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18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적시리아지원그룹’(ISSG)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음.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해결과 관련해선 올해 초 합의된 민스크 협정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으며, 미국은 민스크 협정이 이행되는 대로 대러 제재를 해제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케리 장관은 또 IS 격퇴전과 관련 러시아와 몇몇 공통점을 발견했다면서 IS와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누스라전선 등의 테러 집단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 이에 라브로프 장관도 시리아 문제와 관련 “지난 10월 30일과 11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18일 뉴욕에서 장관급 수준의 ISSG 회담을 여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미국-러시아 'IS 자금 차단' 유엔 결의안 공동추진(12/17,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자금줄을 끊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17일로 예정된 안보리 결의에서 최근 테러로 기승을 부리는 IS뿐만 아니라 알카에다, 탈레반 등의 국제 테러집단도 표적으로 삼기로 했음.
 - 미국과 러시아는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주재하고 세계 주요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안보리 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발제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루 장관은 “IS 자금조달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테러리스트의 자금 조달을 더 강하게 방해할 수단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음.
- 트럼프-푸틴, 서로 극찬...‘안하무인·마초 코드 공유’(12/18, 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대거 집결한 가운데 열린 연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를 향해 “아주 활달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러시아와 더 긴밀하고 깊이 있는 수준의 관계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같은 발언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미·러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음.
 - 이에 대해 트럼프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자기 나라 안팎에서 매우 존경받는 분에게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은 언제나 대단한 영광”이라고 화답했으며, “나는 항상 미국과 러시아가 테러리즘과 싸우고 세계 평화를 회복하는 데 서로 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물론 양국 간 무역이나 상호 존중에서 나오는 다른 이점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음.
 - 푸틴이 이처럼 트럼프에 강력한 호감을 표시한 것은 일단 대(對) 러시아 정책과 시리아 사태를 놓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유일한 미국의 대선 후보가 트럼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한편, 개인적 성향과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음. 실제로 두 사람 모두 통명스런 매너에 허세 부리기를 좋아하고 남성적인 ‘마초’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짐.

아. 중·일 관계

- “中, 차기 주일대사에 추귀홍 주한대사 임명 추진”(12/16, 연합뉴스)
 - 추귀홍 주한국 중국대사가 주일대사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부임한 지 곧 6년이 되는 청융화(程永華) 주일본 대사의 후임으로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를 임명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6일 양국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복수의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만약 추 대사가 일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면 차기 주한국 중국대사는 누가 임명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중국 외교부에는 (한국 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국장급만 30명 정도여서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음.
- “中日, 문화장관 회담서 난징대학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견”(12/20, 연합뉴스)
 - 한·중·일 3국 문화장관 회담을 계기로 중국에서 열린 중·일 양자 회담에서 양측이 난징(南京)대학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두고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요시이에 부대신은 난징대학살에 관한 “쌍방의 주장·견해가 완전히 다르다.”며 등재 절차의 투명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뒤 문화부장은 난징대학살이 “역사로서 결정돼 있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음.
 - 양측은 난징대학살 자체에 관해서는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과거를 극복하고 교류하자는 뜻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뒤뜰에 중국 국기 꽂혀(12/20, 연합뉴스)
 - 2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5분께 일본 도쿄도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 경내에 중국 국기가 꽂혀 있는 것을 신사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알렸음.
 - 일본 경시청은 누군가가 야스쿠니신사 측이 싫어할 만한 일을 일부러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서 이 신사에서는 지난달 23일 한 차례 폭발음이 발생했으며 사건 직후 화장실에서 시한식(時限式) 발화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음.

자. 중·러 관계

- ‘신밀월’ 중국-러시아, 에너지 등 30여개 분야 계약(12/18, 연합뉴스)
 - ‘신(新)밀월’ 관계의 중국과 러시아가 17일 양국 총리 회담을 계기로 에너지, 투자, 금융, 첨단기술, 세관, 품질검사, 교육, 관광 등 30여 개 분야의 계약 및 협정을 체결했음.
 - 양국은 17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양국 총리 회담에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30여개 분야의 계약 및 협정을 체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했음.
 - 리 총리는 회담에서 “산업과 장비제조 협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투자편리화, 투자 활력 제고, 에너지 협력 심화, 재정·금융, 우주항공, 농업, 군사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제고하자”고 강조했으며, 메드베데프 총리도 “무역·투자, 광산,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핵에너지, 우주항공, 농업, 금융, 군사기술 등 중점 협력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화답했음.
 -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 등으로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으로부터 ‘포위공격’을 받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신밀월’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차. 일·러 관계

- 日 집권당 부총재 내달 러시아 방문…영토분쟁 논의(12/20, 연합뉴스)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집권 자민당 부총재가 다음 달 10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타스통신 등이 20일 보도했음. 나흘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찾는 고무라 부총재는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 당국과 양국 영유권 갈등지역인 쿠릴 4개 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고무라 부총재의 방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이 무산된 이후 일본 고위급 인사의 러시아 방문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며, 아울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르면 내년 봄 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어서 영토분쟁 관련한 양국 정상회담 이전에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함으로 보임.
 - 러시아와 영토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베 총리는 앞서 올해 내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의치 않자 아베 총리가 먼저 러시아를 방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세계인권의 날 맞아 “인권 최상으로 보장” 선전(12/10, 연합뉴스)
 - 북한이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우리 공화국(북한)은 인권이 최상으로 보장되는 나라”라고 선전했음.
- 북, 철도건설에 농민까지 동원(12/10, 자유아시아방송)
 - ‘백두산관광철도’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을 내년도 중요 과제로 내세운 북한이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해 농휴기를 맞은 협동농장 농장원들까지 모두
- 北외무성 “유엔안보리 북한인권 토의 단호히 규탄”(12/12,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작년에

2. 북한인권

- 유엔총회, 압도적 표차로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12/18, 미국의소리)
 -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2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 유엔총회는 12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통과시켰음.
 - 앞서 지난 달 19일 제3위원회 표결 당시와 비교해 찬성표가 7표 늘었음.
 - 이로써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음.
 -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음.
 - 특히,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음.
 -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결의안은 또한, 북한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하고,

-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 이 밖에 결의안은 북한에 대규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음.
 - 한편, 유엔 안보리는 10일 공식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했음.
 - 하지만, 북한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지는 못했음.
- 국제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에 北인권 책임자 회부해야”(12/10, 연합뉴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촉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월 10일 보도했음.
 - 중·러, UN안보리 10일 북한 인권 논의에 반대 표명(12/10, 뉴시스)
 -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미국 주도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했음.
 - 케리 “북한 통탄할만한 인권위반…안보리 논의 환영”(12/1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 공식 논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케리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그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 등을 조사한 오늘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환영한다”고 말했음.

3. 탈북자

- 탈북 대학생 3명, 미 아이비리그 컬럼비아대 편입(12/18, 미국의소리)
 -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대학이 최근 잇달아 탈북 대학생들의 편입을 허가해 관심을 끌고 있음.
 - 이 대학에는 현재 탈북 학생 데이비드 현 씨가 지난해 3학년에 편입해 재학 중이며, 다음 달 봄학기에 2명이 추가로 편입할 예정임.
 - 이들은 모두 학부 과정의 25%를 차지하는 제너럴 스터디스 스쿨(School of

General Studies)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음.

- 학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과정은 편입 혹은 고교 졸업 후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들을 위한 과정으로 1천 900여 명이 공부하고 있음.
 - 다음달 새롭게 편입하는 탈북 대학생 2명은 북한인권 국제행사에서 유창한 영어로 북한의 현실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던 이성민씨와 박연미씨임.
 - 량강도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0년 한국에 정착한 뒤 한국외국어대학 영어 통번역학과에 다녔으며 지난 6월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정 편입허가를 받았음.
 - 이 씨는 앞서 탈북민 최초로 캐나다 의회에서 인턴(견습직원)을 했고 여러 유명 외신 매체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었음.
 - 역시 량강도 출신으로 지난 2007년 탈북한 박연미 씨는 한국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 중 컬럼비아대학 편입에 성공했음.
 - 북한 장마장 세대인 박 씨는 영어 인터넷 방송 ‘프리덤 팩토리-자유공장’ 진행자로 활동하며 유엔 등 여러 국제 인권회의에서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알려왔음.
 - 이성민 씨와 박연미 씨의 컬럼비아대학 편입을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은 지난해 탈북자 최초로 이 대학에 먼저 편입한 데이비드 현 씨임.
 - 함경북도 출신인 현 씨는 소학교 졸업 후 2000년대 초반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뒤 뉴질랜드와 미국의 대학을 거쳐 지난해 컬럼비아대학에 편입했음.
 - 데이비드 현 씨는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뿐아니라 국제 문제란 점에서 더 많은 탈북 젊은이들이 외국 체험을 통해 “준비된 지식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 유엔인권사무소, 탈북자 사법지원 논의(12/11,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산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Seoul)가 오는 12월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대강당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함.

4. 이산가족

- 홍용표 “이산가족-금강산 맞교환 합의 바람직 안 해”(12/17, 연합뉴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7일 남북 당국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대금 지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중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 금지’ 조항의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 홍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산가족과 금강산관광 문제의 연계 여부에 대해 “이산가족분들에게는 죄송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원칙까지 훼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산가족분들에게 가서 이해를 구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앞으로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끌어나가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그냥 맞교환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밝혔다.
 -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 해결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음.
 - 홍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에 대해선 열려 있다.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 그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꼭 한번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정치적 고려에서 정상회담을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 때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 홍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선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 관련)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밝혀왔다”면서도 “다만, 그런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 5·24 조치가 남북대화를 틀어막고 있는 주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 납북자

- 일본서 북한인권주간 열려…납북자 문제 부각(12/17, 미국의소리)
 - 일본에서 지난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발 주간’을 맞아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음.
 - 일본 정부가 지정한 이 행사 기간 중 도쿄 시청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과 가족들의 사진 300점을 전시했음.
 -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올해는 처음으로 사진들 밑에 영어 설명이 달렸음.
 - 도쿄 시청이 관광명소란 점을 감안해, 외국인들에게 납북자 문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임.
 -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납북자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발주간’을 지정했고, 도쿄 시청은 매년 관련 사진전을 열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일본인 납치피해자가족회는 납북자 관련 DVD를 고등학교 교재로 활용해 달라고 사이타마 현에 요청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족회는 16일 도쿄 인근 사이타마 현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이 요청했으며, 앞으로 DVD 150 장을 현 내 각급 학교에 배부할 예정임.
 - 납치피해자가족회는 고등학교의 반응을 본 뒤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배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이밖에 지난 13일에는 도야마 시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북자 문제 강연회가 열렸음.
 - 이 자리에서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인 이즈카 시게오 씨는 “납치 피해자 전원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국이 협력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음.
 - 납북자의 아들인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돌려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음.
 -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음.
 - 이어 북한은 지난해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이에 맞춰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음.

-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두 나라 간 공식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임.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스위스, 북 사회기반시설 재정지원(12/15,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정부가 최근 북한의 경제회복과 사회기반시설 지원 분야에 미화 약 10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다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금 현황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밝혔음.
 -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기부금의 흐름을 집계하는 ‘재정확인서비스(FTS)’ 사이트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 10월 북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에 10만 3천 달러를 지원했음.
 - 지난 6월 같은 분야에 약 1만 2천500달러, 그리고 지난 2월 산간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10만 9천여 달러 등 스위스 정부가 올해 북한의 ‘경제회복과 기반시설’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약 22만4천 달러임.
 - 스위스의 올해 대북지원 총액인 950만 달러의 2.4%임.
 - 스위스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약 600만 달러를 기부하며 전체 대북 지원금의 63%를 식량지원 분야에 집중했음.
 - 이밖에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등 5개 도의 농촌 지역에 수도관과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상하수도 지원 분야에 약 200만 달러를 지원했고, 유럽의 민간연구소인 농업생명과학센터(CABI)에 약 16만 달러, 산간농법기술 지원에 약 110만 달러 등 농업 기술 분야에 126만여 달러를 기부했음.
 - 스위스 정부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산간농법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농업생명과학센터 관계자는 경사지를 활용한 경작이 북한에서 이미 실용적인 농사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평지에서도 토지침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산간농업’을 황해북도를 비롯한 시범사업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급경사지를 농토로 활용하면 산간지역 주민들의 형편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산림 황폐화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 3천만 달러(12/16,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은 국제사회가 올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을 3천 만 달러로 집계했음.
-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금 현황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FTS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 규모의 약 2천 800만 달러와 비슷하지만, 2013년의 약 6천 2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줄었음.
- 또 2013년 대북 지원규모도 2012년의 1억 1천 300만 달러에서 45 % 감소한 바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계속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유엔 인도지원조정국의 강경화 사무 차장보는 국제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북한의 정치적 환경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점차 줄어들게 했다고 말한 바 있음.

■ 한미약품, 북 어린이에 의약품 지원(12/17, 자유아시아방송)

- 해마다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했던 남한의 제약회사, 한미약품이 올해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음.
- 한미약품은 지난 15일 민간 지원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함께 인천항에서 의약품 지원 물자 북송식을 가졌음.
- 이젠 물품 상자를 실은 배가 인천항을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중국 대련(다롄)항을 거쳐 오는 28일쯤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다고 한미약품 측은 밝혔음.
- 이번에 지원하는 의약품은 어린이비타민과 종합감기약 등으로, 시가로 약 85만 달러어치가 평양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에 보내짐.
- 이번 물자 북송은 남북 당국 간 경색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음.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나동규 이사장은 “북한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기증하는 한미약품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약품 지원이 남북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사업에 큰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의약품 지원 확인을 위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측은 내년 3월 초 방북할 계획임.
- “북 수재민에 특수 단열텐트 지원”(12/17, 자유아시아방송)
 - 쉘터 박스는 “북한 수재민들이 추운 겨울 날씨를 견디기 위해 특별히 단열재가 더 들어간 텐트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겨울 한파용 ‘특수 단열 텐트’를 제작해 제공했다”고 전했다.
 - 이 단체는 이번 달 초 홍수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의 나선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텐트 500개를 북한에 보냈고, 다음주 2차 구호 지원품이 선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쉘터 박스는 북한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 견뎌야 하는 수재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라면서, 북한의 겨울 날씨에 맞는 이번 한파용 특수 텐트의 제작 과정에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 쉘터 박스는 또 이 텐트는 한번 사용하면, 약 2-3년 간 가정집처럼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 이 기구는 이 밖에도 태양 전등, 물통 등 생필품이 들어간 쉘터 박스 구호상자 500개도 함께 지원했음.
 - 이번 지원의 총 예산은 미화로 38만 달러로 영국 정부를 비롯해 유럽 국가와 개인 기부자의 모금으로 이뤄졌음.
 - 또, 쉘터박스 직원 2명이 내년 1월 말 나선에 약 10일간 파견될 예정이라면서, 올해 이뤄지는 2차례의 지원이 수재민들에게 정확히 분배되고 잘 이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임.
 - 이번 구호품의 분배과정에는 대한적십자사도 함께 협력해 동참함.
 - 지난 9월 북한 당국은 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쉘터 박스에 수해 복구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 한미약품, 북 어린이에 의약품 지원(12/17, 자유아시아방송)
 - 해마다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했던 남한의 제약회사, 한미약품이 올해도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8. 북한동향

- 우리 국회 여·야당의 ‘北 인권법’ 정기국회 처리 합의 관련 ‘우리(北)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과 남 사이의 회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저명한 사실’이라고 비난(12.8, 평양방송/북남 대결을 격화시키는 불순한 도발행위)
- 미국식 가치관과 인권기준은 “전인류를 대상으로 한 위험천만한 인권말살 행위”라고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세(北인권문제 제기 등)” 비난 및 ‘인민대중의 인권옹호 투쟁’ 강조(12.9,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인민대중의 인권을 옹호하자)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